환경과 에너지

이자료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제르 석유장관이 최근 캠브리지 에너지연구소(CERA)가 주최한 「미래에너지전략」에 관한 세미나에서 행한 주제발표 내용을 옮긴 것이다. 그의 견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한 산유국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편집자註>

「환경, 에너지, 개발」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 관한 나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를 주신 *Daniel Yergin* 박사와 *CERA*측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코스트가 높은(비효율적인) 정책이 성급하게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삼각관계에 관한 다양한 견해들을 평가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위성에 거주하고 있는 공동거주자로써, 지구를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물리적인 환경뿐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환경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인간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은 신이 위탁한 신성한 의무(*trust*), 즉 인간이 환경을 이용할때 자연의 균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기초로 하고 있다.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사회적·정치적 실존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내가여기서 언급하는「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환경문제에 관한 입장이 – 마치 다른 사람들은 우리 공동거주지인 지구의 환경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이 – 환경문제를 독점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오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누가 환경을 가장 많이 해쳤는가에 대해 서로 비난한다면, 이것은 결국 비생산적인 일이 될 것이다. 즉 성장이라는 미사여구 아래서 산업생산을 통한 환경파괴를 자행한 선진 부국들인가 아니면, 환경을 코스트로 생존하려는 빈국들인가 하는 것 말이다.

우리는 서로의 견해와 이면의 관심을 이해하지 않고는 의미 있는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다. 자신의 입장만을 집착하거나 자신의 문제만을 주장하는 이기적 관심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 이유는 지구의 환경은 경계가 없고, 세계는 점점 상호의존적이 되어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체적 의미의 검증없이 환경파괴의 특정 측면만을 찾아내서 비난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내가 이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지난해 6월 리우환경 개발회사에서 환경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자세히 보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는 그 회의의 관련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견해들이 어떻게 무시당했는가를 보았다. 또 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견해가 어떻게 오해와 편견을 받게 되고 무시되었는가를 보고 서글펐다. 나는 정치적·경제적 관심이 어떻게 하여 과학

의 논리와 균형된 경제성장 및 빈곤의 개선을 방해했는지를 알아차렸다. 그때 필요했으며 지금도 시급한 것은 환경보존과 성장유지라는 분리할 수 없는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3/4에 달하는 개도국 인구의 문제와 소망에 대한 적절한 고려없이 달성될 수 없다.

우리는 환경과 개발이라는 두가지 문제에 대한 균형된 해결책을 찾기위해서 마음을 열고 리우회의에 임했었다. 또 우리는 모든 회의와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들이 더 높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 우리는 환경문제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핵 문제를 다루는 태도를 살펴보자. 개도국에 에너지 기술을 이전할 필요가 있을 때 「안전」이라는 단어의 삽입은 계속 무시되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핵에너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핵에너지와 관련된 위험 및 잠재적 위험 및 폐기물 등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했다.

반면 모든 비난은 석유와 환경파괴에 미치는 석유의 과장된 영향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기후변화와 CO_2문제내에서도 산림벌채의 문제는 타협되고 있다. 관심은 CO_2감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석연료 사용 감축에 모아지고 있다.

세계는 국제적, 지역적이든 제도측면에서든 관료주의에 빠져 있다. 공직생활을 30년이상 해왔기 때문에, 나는 관료주의가 어떤 계획을 망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재편성하는 가를 잘 알고 있다.

모든 정부들은 이러한 퇴행적인 개발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비능률적인 환경정책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이제 논쟁의 초점인 개발문제로 돌아가자. 세계은행은 10억 이상의 인구가 아직 극심한 빈곤상태에 있으며, 경제개발을 가져올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빈곤문제를 공략하는 것은 도덕적인 필요성은 물론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선진국들은 빈곤을 타파하고 세계 경제성장을 증대시키는데 직접 책임이 있다.

열약한 빈곤은 인류에게 있어서 최악의 환경오염이다. 이것은 CO_2보다도 훨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세계의 빈국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투쟁은 환경보호의 정당한 관심을 압도한다. 배가 부를때 미래세대를 언급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배고플 때는 다음 식사를 넘어서서 생각하기 어렵다.

일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실행되는 많은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이나 국제적 합의나 원조기관을 통해 개도국에 가해지는 부적절한 환경제약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지속능력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도국들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만 년간 1240억달러의 외국원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부국들이 대신 지원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최근 새로 부각되는 「환경주의」(environnentalism)라는 이데올로기는 세계 대다수 인류의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발을 위한 개발은 있을 수 없다. 나의 견해로는 에너지, 특히 석유를 사용하지 않고 세계 경제개발을 달성할 다른 수단을 생각할 수 없다.

석유는 Yergin박사가 石油人시대라고 불렀던, 즉 산업문명의 정수이다.

에너지 소비를 감축시키려는 정책이나 규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통해서 에너지소비구조를 바꾸려는 정책은 성장에 영향을 미치고 개발목표를 저해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탈에너지나 탈석유정책이 결국은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환경문제에 관련한 불확실한 미래결과가 가져올 위험에 대비한다는 생각은 핵에너지촉진 등이 코스트가 더 높은 정책을 채택할 위험과 경중을 가릴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의 시기, 규모, 패턴에 대한 과학적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한 불확실성은 유엔의 범정부기후변화 위원회(IPCC)의 과학적 평가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지식의 증거가 있는 반면,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의 객관적평가에 도달하기 위해 계

속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다.

과학적인 평가가 내려지지않은 상태에서 코스트가 높은 정책으로 성급히 뛰어들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구온난화,유발개발, 화석연료, 기후변화 등에 대해 계속 논쟁을 벌이자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한다. 즉 경제성장과 개발에 건강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 및 석유시장의 안정 및 가측성을 위한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 등이다.

에너지나 석유에 과세하는 것은 (그것이 탄소세이든 에너지세이든 수입세 이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환경적인 동기 이든 효율성 개선을 위한 것이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것이든지 이것은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를 희생시킨다. 이러한 에너지稅가 표방하는 목표자체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연구결과는 CO_2를 감소시키는데 있어서의 탄소세의 유효성 및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수입세의 유효성, 효율성 개선을 위한 세금의 유효성을 의문시해왔다.

이러한 에너지세는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하고, 소비감축 및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부과 근거이다. 그러나 사실상 선진국 특히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불완전하며, 에너지稅 부과로 이러한 시장 불안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다수 선진국들에 있어서 석유에 대한 차별조치들은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원유가격의 3~4배까지 달하게 되었다. 반면 석탄은 단위당 CO_2 방출량이 석유보다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일, 일본등에서는 톤당 105달러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석유세와 석탄지원금이 예산목표가 아닌 환경기준에 따라서 재편성되었었다면, 세계환경은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도 훨씬 개선되었을 것이며, 최종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을 지불해도 될 것이다.

미국에서 석유에 부과되는 세금을 탄소단위로 환산한다면 톤당 100달러 규모이며, EC의 경우는 450달러에 해당된다.

만약 석유제품에 대한 이러한 과세가 각 화석연료의 탄소량에 따라 부과된다면, 추가적인 과세 없이도 OECD지역의 CO_2방출량은 훨씬 더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즉각적인 재정관심과 편협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종종 환경목표에 우선한다.

여기서 화석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과학적 논쟁을 계속하려는 것은 아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석유가 주범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저명한 환경론자 그룹의 한 최근 저명연구는 세계가 석유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그 연구의 제목인 "석유없는 에너지"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나는 석유가 실제 환경파괴에 기여하는 것 이상으로 과도하게 과세되었다고 확신한다. 나는 석유소비를 강제로 감축시키려는 다양한 정책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코스트가 막대하다는 것과 이것이 궁극적으로 세계석유 시장의 불안정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기본적인 가정은 경제성장에 따른 석유수요의 정상적인 성장을 견제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가 의도적으로 억제된다면 산유국들이 소비국들의 정책에 대응하여 현재 정책의 적합성을 재평가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산유 개도국의 입장을 살펴보자. 내가 이제까지 거론했던 에너지 및 환경에 관한 부정적인 정책 추세는 실로 경각심을 갖게 한다.

사우디는 세계 석유시장의 주요 안정세력이다. 우리는 지난 수년간 안정적 석유공급과 유가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적절한 석유공급을 보장해 주기 위한 생산능력 증대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또 석유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최신 유조선단을 건조하고 있다. 우리는 안정공급과 안보를 보장해줄 통합적인 과정을 위해서 전세계의 하류부문 합작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또 경제개발 및 국민생활개선을 위해서 다른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석유수익을 사용해 왔다. 사우디의 공식적인 對外 경제지원은 최고수준이다. 지난 20년간 우리의 對개도국 총지원규모는 670억달러로써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유엔이 추천하

고 있는 0.7% 규모에 비해 훨씬 큰 규모이며, 우리보다 부유한 선진국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누가 석유부국이고 석유빈국인가? 1991년에 1160萬b/d를 수출한 개도국 석유수출수익은 700억 달러이었던 반면, EC 국가들은 1160萬b/d의 소비로부터 석유세로 2220억달러를 징수했다.

석유시장에서 사우디의 역할에 비춰볼 때 선진 소비국들이 국제석유교역과 시장안정을 해치는 정책을 거듭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우리는 소비국의 많은 정책 수단에서 안정공급 혹은 환경보호, 재정적자완화등의 이유로 탈석유 정책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선진국의 최종소비자는 정책입안자들의 「석유공포증」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 및 석유에 관한 여러가지 세금 중에서 국내 생산보호를 구실로 석유수입세가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세계가 보호주의의 위험을 충분이 겪었고, 좀더 개방적인 무역체제로 이행되는 이점을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수입관세 등으로 석유교역에 장벽을 세우는 것은 GATT정신에 위배되며, 지질학과 경제학의 논리에 반한다. 이러한 관세는 현재의 공급구조를 의미있게 바꾸지 못할 것이며, 경제혼란을 가중시키고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나는 왜 42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석유수입은 문제가 되면서 58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자동차 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주요 對美 석유수출국이며 신뢰할 만한 공급자로써, 또 오랜 우방으로써 사우디에게는 그러한 수입세는 우리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국내 하류부문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 몇가지를 상기코자 한다.

석유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은 일부 전문가들이 묘사했듯이, 석유는 미래에로의 연결연료(bridge fuel)이기 때문이다. 석유는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하다. 우리는 석유를 가지고 있고 세계는 이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왜 세계 인류의 복지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하늘이 주신 귀중한 선물인 석유를 괄시하는가? <MESS.2.15>

■ 경제전망 ■

ESCAP, '93 亞·太지역경제 전망

유엔 아·태 경제사회이사회는 「아·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93년 한국경제는 GDP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7.1%, 인플레율은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태 지역경제 전망

	GDP 성장율		수출 증가율		무역수지(달러)		인플레율	
	'93년	'94년	'93년	'94년	'93년	'94년	'93년	'94년
한 국	7.1%	7.7%	11.5%	10%	(+)20억	(+)30억	8%	7.5%
대 만	7%	7.2%	8.1%	8.5%	(+)108억	(+)79억	5%	4.5%
중 국	11%	9%	16%	15.2%	(+)49억	(+)26억	7.2%	5%
싱 가 폴	5.4%	6%	8.5%	8.4%	(−)91억	(−)99억	3.6%	2%